

한-EU FTA 무엇이 문제인가

한-미 FTA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소조항과 농업 피해가 작은 것으로 알려졌던 한-EU FTA가 한-미FTA 못지 않은 독소조항과 특히 농업분야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농업분야 연간 피해 예상액은 '06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결과에서 3천8백억원으로 추정했으나, 최근 축산분야만 5천2백억원까지 피해액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한-EU FTA가 국내 농축수산업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한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한-EU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분야 예상 피해액과 독소조항 그리고 진행 일정 등을 알아본다.

〈자료: 농정신문 7.20〉

“농업정책 효율성 높이려면 ‘포괄적인 분석틀 개발’ 필요”

농업이 산업으로써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기존 가격·품질·수출입액 등 성과지표 위주의 단편적인 분석만으로는 효과적이고 연속성 있는 정책 수립·추진에 한계가 있어 보다 포괄적인 분석틀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농업경쟁력 개념과 저해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경쟁력에 대한 의미가 너무 광을

뿐만 아니라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분석이 미흡해 일관되고 연속성이 있는 연구나 정부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 농수축산신문 7.20〉

농촌지역개발 및 활력증진사업 조기 집행 목표 초과달성

- 농어촌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활력소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지자체 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농촌지역개발 및 활력증진을 위한 정책사업들이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촌지역개발 및 활력증진사업의 조기집행을 위해 사업시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였다.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뉴스 7.21〉

“수질오염 총량제는 지나친 규제”

환경부가 15일 입법예고한 ‘4대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중 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해 한강 수계 상류 시군들이 “지나친 규제”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오염총량관리제는 수계 구간별로 목표 수질을 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단위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규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해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오염총량관리 기본 방침을 수립하도록 돼 있으며 시도지사는 이 기본 방침에 따라 지역개발 계획, 수계 구간별 오염부하량을 할당한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만들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 및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자체 수립한 뒤 시행해야 하고 매년 이행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와 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 동아닷컴 7.22〉

새만금추진단장 해상경계 갈등 조정돼야

국무총리실 이병국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장은 24일 “새만금 매립지역을 둘러싼 갈등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전북도를 찾은 자리에서 “새만금 매립지를 더 차지하려는 김제시와 군산시, 부안군의 갈등은 새만금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단장은 “이들 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전북도가 나서 슬기롭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단지를 시작으로 내부 개발이 시작된 새만금 매립지(4만 100ha)는 국립지리원의 해상경계선 지도를 기준으로 ‘바다 경계’를 ‘육지 경계’로 바꾸면 71.1%는 군산시, 15.7%는 부안군, 13.2%는 김제시에 각각 속하게 된다.

〈자료: 조인스닷컴 7.24〉

“농지확보 의지, 애초부터 없었다”

새만금 간척지를 산업, 관광, 환경이 조화된 세계적인 복합도시로 건설한다는 정부 계획이 확정, 발표됐다. 하지만 전체 새만금 개발 면적 중 농지개발 비율이 지난 참여정부 계획 때보다 절반 이상 축소된 데다 이번 정부 들어, 개발수요 발생 시까지 농지로 활용하려 했던 유보용지도 대부분 관광 및 레저, 산업용지 등으로 분류돼 현 정부의 농업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비난의 목소리다. 정부는 지난 23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새만금위원회를 열고 새만금 중심지역을 핵심적인 전략사업으로 지정, 산업·관광·환경이 조화된 세계적인 명품복합도시로 건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만금 내부개발 및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안’을 확정했다.

〈자료: 농어민신문 7.27〉

쌀 이기작시대 멀지 않다

‘아이초크, 그린글로브, 오크라, 쓴오이, 인디언시금치, 강황, 차요테, 사탕무.’

제주도를 비롯한 남부지역에 아열대 기후대가 늘면서 최근 재배가 부쩍 늘어난 열대·아열대 작물들이다. 고급요리에 꼭 필요한 ‘아티초크’는 제주에서 겨울을 날 수 있는데다 상업성이 있는 수확량도 늘면서 시험재배가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한반도 주변의 농작물과 어종이 과거와 판이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기온이 계속

오르고 강수량도 크게 늘어나면서 주요 수종, 농작물의 북방한계선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점이다.

〈자료: 아시아경제신문 7.28〉

새만금 농지 '영양실조'

새만금 간척지 가운데 농업용지의 유기질 함량이 낮아 농사를 짓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 농업기술원은 28일 2002년부터 새만금 간척지 농업용지 가운데 20곳을 선정해 매년 3차례 유기물 함량을 조사한 결과 해마다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2002년 당시 1.12%였던 유기질 함량은 2004년 1%, 2006년 0.86%로 낮아졌고 올해는 0.51%로 떨어졌다. 이같은 유기질 함량은 국내 논 평균 2.2%, 밭 평균 1.9% 등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이다. 또 벼의 생육에 맞는 적정 유기질 함량 2.5~3%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낮아 농지로 조성해도 농사를 짓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자료: 서울신문 7.29〉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마련해야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추가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2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환경단체와 유관기관, 교수 등 수질분야 전문가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도 수질분야 신규시책 및 새만금 수질개선추가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초청 세미나'를 개최하고, 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새만

금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안)'과 전북도 역점시책으로서 새만금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및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부분 '점오염원' 관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비점오염원'에 대해서는 추가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자료: 전북일보 7.29〉

새만금, 명품복합·녹색생태도시로 조성

새만금이 산업·관광·환경중심의 명품복합도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녹색생태도시로 조성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방조제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토지조성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제3차 새만금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안' 수립방향을 확정했다. 이번 확정된 계획안은 국내외 전문가 자문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12월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종합실천계획안에 따르면 새만금 개발에 있어 세계적 명품복합도시 건설, 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위한 5대 선도사업 추진, 명품복합도시에 부합하는 수질 확보, 녹색생태도시 조성, 내부 토지에 대한 저탄소 녹색개발 기법 도입 등을 개발의 원칙으로 정했다.

〈자료: 농수축산신문 7.30〉